김효석·박상천·박주선씨 당권 도전

■민주 지도부 입성 노리는 광주·전남 의원은

3선 이낙연·김성곤·유선호씨 원내대표 경선 나설 듯

김영진 국회부의장 도전…박지원씨 복당 여부 변수로

통합민주당이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내부를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당 지도부 진입을 위한 탐색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총선 직후라는 점을 감안해 아직까지는 "당권 도전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출마의사를 공식화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지만 발언의 행간과 물밑 움직임 등을 보면 이미 팽팽한 기 싸움에 돌입한 형국이다.

현재 당권 도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로는 박상천 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박주선 전 의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다.

박 대표는 총선 전 통합 이후 동교동계와 물밑 접촉을 하며 당권 도전에 대한 가능성을 두드려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측근들도 독자세력으로는 전당대회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 정동영계 또는 동교동계 등과 전술적 협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 전부터 측근들에게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온 김효석 원내대표는 13일 '문제는 민주당의 현대화'란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전당대회는 당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왜 졌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도외시한 채 '누구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것인가'에 당 체제정비의 무게추가 기운다면 또 다른 패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당의 행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주선 전 의원은 이날 "세력교체를 해서 임무교대가 돼야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과거에 지도부를 했던 사람들이 또 나오는 일이 되풀이돼 국민이 민주당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면 다시는 회생할 수 없다"며 주도세력 교체론을 편 뒤, 당권 도전의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한 바 없지만 차차 생각해보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우 주변에서 당권 도전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전당대회 전 복당 여부가 선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도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역 출신 당선자는 3선 반열에 오른 이낙연, 유선호, 김성곤 의원 등이 있다.

이 의원 본인은 원내대표 경선 출마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측근들을 중심으로 경쟁 상대와 경선 승리 방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 의원도 경선 참여를 검토 중이며 18대 국회 전반이 아니면 후반기에라도 반드시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다는 입장이다. 유선호 의원도 은밀히 원내대표 경선 가능성을 점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국회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선자는 김영진 전 의원이 유력하며 박상천 대표도 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회부의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효석, 최인기, 이낙연, 주승용, 서갑원 등 통합민주당 전남지역 당선자들이 지난 11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효석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우선"

민주 전남지역 당선자들 5·18 묘지 참배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6월 국회에 앞서 5월 임시국회는 열기 힘들다"고 밝혔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중인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인기(나주·화순), 이낙연(함평·영광·장성), 주승용(여수갑), 서갑원(순천) 당선자 등 18대 총선 민주당 전남지역 당선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번 총선에서 절반 이상의 현역의원이 낙선했는데 이들이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참여할 지 걱정"이라며 "6월 국회에 앞서 새 지도부 선출, 상임위원회 재편 등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오는 6월 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야가 협상을 통해 6월 국회의 원구성 준비를 차질없이 하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어차피 6월 국회가 예정돼 있는데다 5월 국회 역시 5월 말에 법안을 처리하는 만큼 6월 예정된 것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 현안 협력하자"

민주 광주 당선자 '7인회' 모임 결성

광주지역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7명이 '7인회' 모임을 결성, 지역 및 정국 현안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들은 김동철 (광산갑) 당선자를 모임 간사로 하고, 매주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통해 광주지역 현안 및 한나라당에 맞서는 견제 야당의 역할과 향후 진로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기로 했다.

김 당선자는 "18대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당선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향후 지역 발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한 상임위 배정이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인회'는 또 오는 30일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 시정현안 보고를 받고 광주시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호남 무소속 민주 복당 '난기류'

당권 구도 맞물려 반대 의견 높아

호남 무소속 당선자 6인의 통합민주당 복당 문제가 6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경쟁 구도와 맞물리면서 난기류에 휩싸였다.

특히 목포의 박지원 당선자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13일 통합민주당에 따르면 호남의 무소속 당선자들은 공천 과정에서 원천 배제 원칙과 내부 경쟁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서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불허' 입장도 밝히기는 했지만 '공천 배제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총선 후 복당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무소속 당선자 모두 당선 후 민주당 복당을 주장한데다 총선에서 81석을 확보한데 그친 통합민주당의 현실도 무소속 후보들의 복귀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일부 인사들이 호남지역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에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유력한 당권 주자인 정세균 의원은 지난 10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신뢰를 얻으려면 아프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은 의석을 몇 석 늘리는 것보다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남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상천 대표 측에서도 "현재로서는 전대 전에 복당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며 "18대 국회 개원 후에나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기류는 총선 과정에서 쌓인 민주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과의 앙금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득권에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무소속 당선자들의 당내 복귀가 그리 탐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DJ의 복심인 박지원 당선자의 경우,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부 당권 주자들과 계파를 중심으로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당선자는 당선 직후 "민주당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겠다"며 복당과 함께 경선 참여 의사를 드러내 복당 논란에 중심에 선 상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나 문제는 시기라는 입장이다. 복당이 이뤄지더라도 전당대회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총선 기간 동안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던 손학규 대표는 최근 "어차피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은 원래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냈던 분들이며 순리대로 하겠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정체성 '우향우' 하나

김근태·친노그룹 전멸 중도·보수층 인사 약진

18대 총선 결과 통합민주당의 계파별 세력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당내 이념지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개혁 그룹이 줄줄이 퇴장한 반면 중도 또는 중도보수 성향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당의 이념 색채가 '우향우'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재야파로 불리는 김근태(GT)계가 침몰한 것을 비롯, 386 운동권 계열, 친노(親盧) 계열 등 진보·개혁 그룹은 급격한 퇴락의 길을 걸었다.

대신 손학규계와 구 민주당 출신은 대거 약진했다. 지난해 중도보수를 지향하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던 김한길계 상당수도 생환했다. 강봉균, 김진표, 홍재형 의원 등 관료 출신들도 당내에서 '보수' 쪽으로 분류된다.

손학규 대표의 '새로운 진보' 표방으로 이미 당의 이념좌표가 한 클릭 오른쪽으로 이동한 데 이어 중도보수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진보·개혁 진영에 대한 피로증과 맞물린 사회 전반의 보수화 경향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신 민주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한반도 대운하, 대북 문제 등에 있어 분명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강한 야당'의 면모를 과시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선명야당으로서의 정체성 정립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섞인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자칫 정책 이슈, 법안 처리 등에서 한나라당과의 선명한 차별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4년 내내 거여(巨與)에 끌려다닐 수 있는데다, 한나라당과 진보진영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서 양쪽 진영의 협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가 위축되면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개혁 성향 중진인 천정배 의원 등과 살아남은 386인사 등을 중심으로 개혁블록의 복원 움직임이 전개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전대에서 대표주자를 내세워 정체성 논란에 불을 당길 개연성도 커 보인다.

이 경우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의 해묵은 '난닝구'(실용) 대 '빽바지'(개혁) 논쟁이 재연되거나 열린우리당 출신과 구 민주당 출신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